

“대체부지 확보, 환경부 움직임… 접근성 개선 기대”

건설추진 14년만에 국립공원 해제 박우량 군수 “당위성 적극 설득” 김영록 지사 “전남도민 숙원 해결”

신안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14년 만에 추진된다. 그동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수차례 무산됐던 ‘국립공원 해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다.

전남도도와 신안군이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체부지를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환경부 심의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심의 통과로 흑산공항 건설은 올해 착공이 기대되며, 접근성 개선과 관광활성화 뿐 아니라 섬 주민의 이동권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립공원 대체부지 확보 ‘신의 한수’

신안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공원 해제’가 환경부 국립공위원회(이하 국립공위) 심의를 통과한

것은 전남도와 신안군의 국립공원 대체부지 확보 방안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국립공위는 3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36차 회의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을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이날 마지막으로 상정된 흑산공항 예정지 공원해제 등이 포함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2020년 개항 예정이었던 흑산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에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보류됐다.

전남도도와 신안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용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하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흑산공항 착공을 위해 노력을 펴왔다.

신안군 등이 제시한 국립공원 대체부지 제안안은 흑산면 예리 공항 건설예정지(68만3338㎡)와 인근 도초, 비금, 흑산면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도초 비금 명사십리 해수욕장 공유수면과 비금면 일대 5.5㎢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자는 게 골자다.

결국 대체부지 제안안이 이번 국립공위 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중지됐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립공위 전체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대체부지 제안안이 위원을 설득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흑산공항 올 하반기 착공 기대

국립공위 심의를 통과한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을 검토하면서 본격화됐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했다.

흑산공항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흑산면 예리 산4번지 일원 68만3000㎡ 부지에 길이 1.2km 활주도와 계류장, 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건설해 50인승 항공기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신안군의 숙원사업이다. 흑산공항은 예상 공사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배길 등으로 7시간에서 1시간대로 단축돼 교통약자인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향상된다. 또 연간 1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4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189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관광 산업활성화 및 인구소멸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활성화·이동권 해결” 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흑산공항 건설 부지 국립공위 심의 통과는 그동안 전남

도와 신안군,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뤄낸 위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 건설은 전남도민의 20년 염원이 깃든 숙원사업이다”면서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교통약자인 도서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개선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선박 이외 교통편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응급의료서비스 등이 크게 개선되고, 천혜 자원인 흑산도 등 전남 도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우량 군수는 “국립공위 심의 통과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기자**

나주시 “광전연 재분리 반대”

윤병태 시장 입장문 발표 “시민 합의를 정진 후퇴일뿐 상생 입각 논쟁 확산 안돼”

나주시가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쟁 관련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위대한 합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1일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도의회 발로 촉발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쟁은 그간 수많은 결실과 노력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연구원 재분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양 시·도가 이뤄낸 합의 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아이콘이다”며 연구원 존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1991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부터 각각 분리 운영 돼오다 2015년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양 시·도 상생협력을 기점으로 연구원 통합 운영을 공동 합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 시장은 “정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도 상생을 위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재분리를 또다시 운운하는 소모적 논쟁은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광주전남연구원 존치·분리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상생발전이라는 당초 설립목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위적 분리보다 연구원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공정회 등 생산적 논의를 거친 후 시·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공직자 청렴실천 선언

펼치고 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31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신규 임용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선언·청렴 서약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광주 동구 제공

윤 시장은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출연금, 연구 인력이 충분치 않은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정책연구 보다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조직 자생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미래 백년과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합의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시장은 “2016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광주전남연구원 건축 부지를 이미

오래전 확보한 상태”며 “혁신도시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억원의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출연할 준비가 돼있다”고 연구원 존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나주=박송엽 기자

제296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개회 안내

- 기간** 2023. 2. 6. ~ 2. 14. (9일간)
- 개회** 2023. 2. 6. (월) 11:00 본회의장
- 내용**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